2006. 3. 21

報 道 資 料

본 보도자료의 내용 중,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부분은
3월 23일(목) 조간부터,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제3부 거래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부분은
3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편

□ 최근의 정책적 노력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기업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 촉진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명시적·암묵적 규제의 개혁 및 철폐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본 연구는 규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과 기업 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적시하고, 공공의 후생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환경의 개선을 이루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 특히 유효한계세율, 진입규제, 사회·제도적 변수 등이 산업 또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우리 산업과 경제가 입을 손실을 보임으로써 정책입안자와 국민에게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제시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 5p.

제1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설광언 KDI 선임연구위원(958-4092)

제2장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상훈 KDI 부연구위원(958-4107)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3장 선진화된 규제개혁: 기본원칙 및 방식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김일중 숭실대학교 교수(820-0553)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12p.

제11장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상훈 KDI 부연구위원(958-4107)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12장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 부패를 중심으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 17p.

제4장 창업규제 현황 및 규제개혁방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707-9823)

제5장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교수(2610-4254)

제6장 고용, 해고 및 노사관계에서의 규제와 대안
김용성 KDI 연구위원(958-4071)

제7장 투자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2173-3023)

제8장 환경규제와 기업활동: 현황과 대안
홍종호 한양대학교 교수(2220-1024)

제3부 거래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 28p.

제9장 거래규제: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이재형 KDI 전문연구원(958-4180)

제10장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3299-1085)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2220-1023)
성태윤 KAIST대학원 교수(958-3535)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인 활발하고 역동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왔음**

○ 제도적 대응으로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 추구

-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하고 규제영향분석(RIA)을 도입하여 신설 규제를 관리하고 규제 제도의 합리화 노력

○ 국민적 협의 도출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옴

□ **규제영향분석(RIA) 도입, 행정조사기본법 입법예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양적이고 가시적인 규제 개혁과 규제품질 제고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환경과 경제의 효율성도 증진된 것으로 추정**

○ '98년말 10,188건 ⇨ '99년말 7,123건으로 3,065건 철폐, 이후 기존 규제는 꾸준히 철폐 및 개선되었으나 신설규제의 도입으로 '05년 중반 현재 7,902개의 규제가 존재

○ 중앙정부 인허가수는 '98년 2,422개 ⇨ '04년 1,700개로 현저히 감소

○ 질적인 면에서도 규제 개혁의 성과 가시화

- 예 1)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행정소요기간 179일→100일, 행정비용 150백만원→15백만원으로 감소)

- 예 2)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기준(1만평방미터)폐지 등

□ **단순한 규제 개혁에서 규제 품질 제고 단계로 이행하는 등, 보다 성숙한 규제 관리 단계로 진입 중**

○ 행정절차법(1996), 행정규제기본법(1997)을 바탕으로, RIA도입, 행정조사기본법 입법예고(2005) 등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RIA실시 및 각 법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토록 요건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규제(법령)수: '02년 799(289), '03년 947(261), '04년 1,054(342)로 증가

□ **이러한 정책적 대응과 체계적 노력의 결과,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대학원(IMD) 등 국제적 기관의 조사에서도 한국의 규제 개혁 성과가 현저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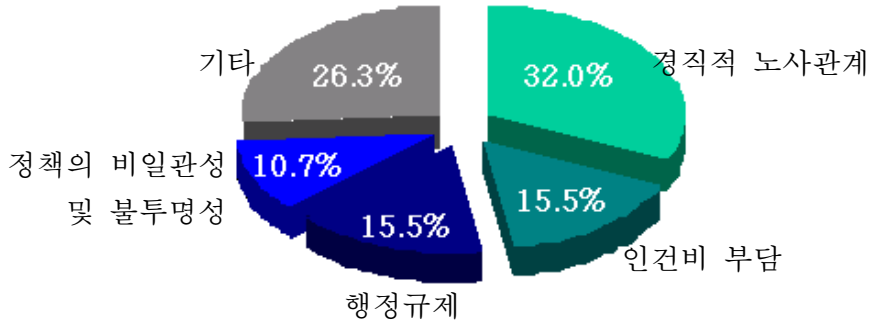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WEF, 2005)은 한국의 규제 부담이 2000년의 상위 46%에서 2004년 상위 23%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투자 애로사항으로 경직적 노사관계와 더불어 규제와 정책의 비일관성 및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고(KDI, 2004), 기업인들의 규제 체감도도 아직 높아, 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의를 환기할 시점**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구함

○ 본 보고서는 특정 산업별 분석을 지양하는 대신 기업 환경의 전체적인 틀을 조감하고, 기업이 창업과 생산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엄밀하게 제시함.

<외국인 투자 애로 요인 분석>



* 자료: KDI (2004)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부분은 3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 **제 I 부에서는 우리나라 규제 개혁의 역사를 회고하고 선진화된 규제개혁을 논의**

○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규제개혁의 역사와 현실을 인식하고(제1장), 선진국의 규제 개혁 논거와 정책의 시사점을 검토한 뒤(제2장), 우리가 선진화된 규제개혁을 위해 재정립하여야 하는 원칙과 방침에 대해 논의함(제3장)

제1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설 광 언 KDI 선임연구위원

경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 규제 개혁, 특히 규제와 관련된 법령개정과 일선집행기관의 규제집행 절차 및 관행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규제개혁은 집권초기의 중요 정책으로 등장하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고, 다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부규제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되면서 규제완화가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현상이 반복**

□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는 근본원인은 규제개혁 목표에 대한 혼란에서 기인**

○ 원론적으로는 규제개혁의 목표를 경쟁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개혁을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 해소 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절차간소화와 기준의 완화는 중요한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강조되어 온 반면,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영역제한 등 기존 사업자에게는 타격을 주지만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핵심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는 규제개혁의 주 대상이 되지 못함**

□ **한편,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규제부담완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자칫하면 건전성규제를 약화시켜 최근의 신용카드회사 부실사태와 같이 시장경제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국가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

□ **규제철폐 혹은 규제완화조치가 자동적으로 건전한 시장의 작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 이후에 시장경제체제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 일은 더욱 복잡하며 전문성을 필요로 함

□ **흔히들 규제개혁은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돈이 안 드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개혁의 주체인 정부가 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투입해야할 시간, 인력, 조직, 예산을 간과한 것임**

○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규제개혁과정에서의 전문성부족으로 연결되어 규제개혁의 속도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은 정권의 개혁의지와 함께 규제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전문성 확보를 필요로 함**

□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규제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개혁방안 마련후의 후속조치인 법령개정과 일선집행기관의 규제집행 절차 및 관행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제2장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 상 훈 KDI 부연구위원 ·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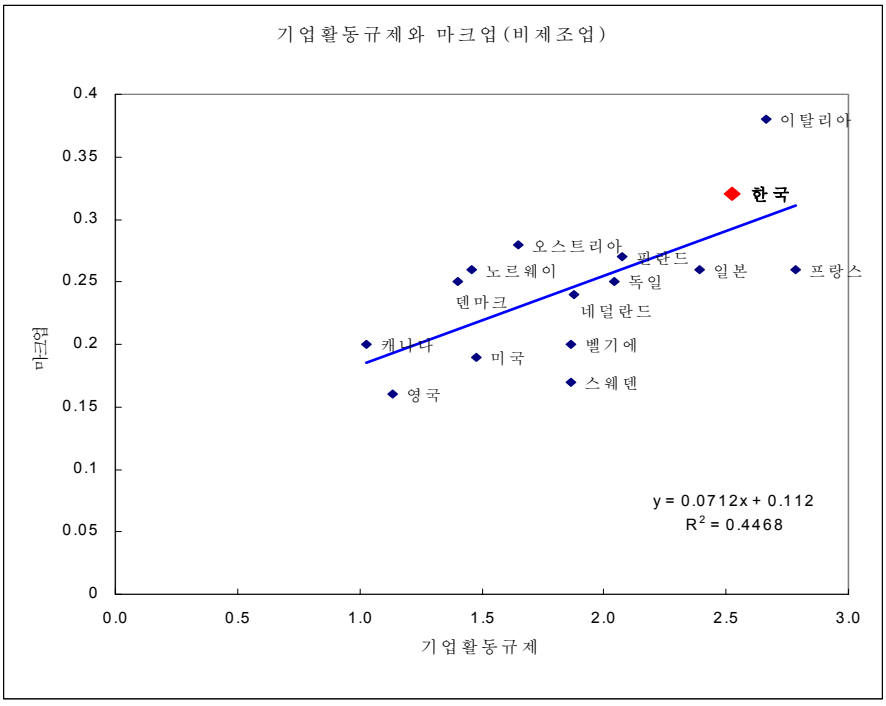
지속적인 정책과제로서 규제개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비제조업 부문의 규제개혁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선진국 규제정책의 현주소를 각종 지표와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함**

○ 이를 통하여, 선진경제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들을 확인하고 우리 규제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고자 함

□ **OECD 회원국인 선진국의 규제개혁정책은 최근 대외개방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특히 유통업, 전문직 서비스업, 네트워크 산업부문 등과 같은) 부문에서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 비제조업부문 기업활동규제의 정도와 이윤수준(마크업)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규제가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함을 시사



* 자료: Conway, Janod, Nocoletti(2005) 및 OECD(2005a)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 주요 사례를 통해서 선진 각국의 규제 정책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행정 부담의 경감이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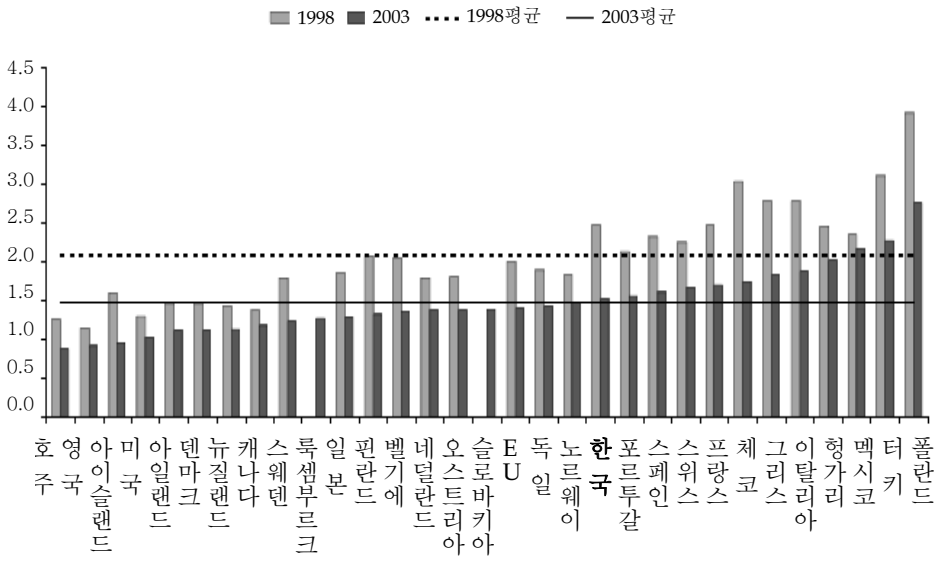
○ 반면,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전문직서비스·유통·농업 부문 등 일부 부문에서 규제개혁이 미진한 사례들도 발견됨

○ 또한 경쟁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잘못 디자인된 규제개혁 정책이 적잖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들도 있었음

□ **규제지수를 통해 살펴본 선진국들의 규제 현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시사**

○ 규제지수의 변화를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현저한 개선이 있었지만, 최근(2003년)의 시점에서 비교해 보아도 규제의 정도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물 시장의 규제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의 규제지수는 2.5에서 1.5로 빠르게 하락(최소규제지수는 0, 최대규제지수는 6)



* 자료: Conway *et al.* (2005)

○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특히 비제조업 부문에서 규제의 경쟁 저해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부문 중에서도 기술 특성상 분절생산 고기술 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에서는 규제의 경쟁 저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부의 직접규제와 같은 강한 형태 규제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규제개혁정책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제로서의 의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의 압력을 덜 받아온 비제조업 및 고기술 제조업 부문에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제3장 선진화된 규제개혁 : 기본원칙 및 방식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김 일 중 숭실대학교 교수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적절히 조합하여 최적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본 장에서는 한층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들을 재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반영되어야 할 규제개혁의 실체적 지침들을 제시**

○ 선진화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었던 규제개혁에 관한 편견 내지는 오해들을 교정해야 함

- 대표적 예: "규제개혁은 단순히 기업의 모든 고충을 해결하는 작업이다", "규제개혁은 그저 규제를 폐기시키는 작업이다", "경제규제는 폐기해야 하지만, 사회규제는 강화해야한다", "규제개혁효과와 시장결과 사이의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인과관계에 대한 오해" 등

○ 나아가 어떤 정부규제이든 민간부문 각종 재산권들과 갖게 되는 필연적인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표사례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선진화된 규제개혁 작업은 바로 이러한 민간재산권의 보호 및 국가의 규제수용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 즉 헌정주의적 기초에 반드시 근거해야 함

○ 이제까지는 주로 행정부 주도로 규제개혁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정부 3부 전체, 즉 입법부와 사법부의 참여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

□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들 중 우리의 인식전환이 특별히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선진화된 규제방식"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고려할 시점**

□ **궁극적으로, "규제개혁=개혁적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메시지를 정책입안가 및 규제개혁종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함**

○ 특정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부과하는 통제방식은 다양하고 또한 다중적일 수 있다는 그간 법경제학적 이론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부명제들을 도출

- a) 대분하여, 현재 대부분의 행정규제들이 속하는 "사전(ex-ante)규제"와 손해배상으로 대표되는 "사후(ex-post)규제"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b) 어느 하나만의 배타적 사용이 사회최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c) 오히려 두 통제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최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d) 바로 이것이 선진화된 규제개혁 작업의 큰 축이 되어야 함

○ “규제개혁=개혁적 규제” 등식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전규제들의 상당수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사후규제와 병용하는 것이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핵심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제Ⅳ부에서는 규제 개혁의 선결 작업으로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인 실증분석으로 제시**

○ 제11장은 우리나라의 명시적 진입규제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별 규제의 정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제12장에서는 명시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면에서는 규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회·제도적 변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

제11장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 상 훈 KDI 부연구위원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진입 규제는 해당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성장이 저해된 것으로 밝혀져, 규제의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함을 시사

□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규제의 개혁이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산업별 분석에서는 1999~2002년의 4년간 자료를 활용, 진입 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해당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임**

○ 진입 규제의 종류를 강한 규제(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와 약한 규제(신고, 등록)로 나누어 각 산업의 하위 산업 중 각각의 규제가 가해지는 비중과 규제가 가해지는 산업의 산출액을 구하여 이러한 진입 규제가, 사업체수, 출하액비율, 고용비율 등으로 측정된 기업의 시장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진입률은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을수록,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즉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신규사업체의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

-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진입률과 고용을 기준으로 한 진입률은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존재할 때 감소

* **즉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에 의한 출하액 또는 고용의 비율이 감소**

- 그러나 신고·등록 등의 약한 형태의 규제가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

○ 결론적으로,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는 다양하게 측정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규제는 아니지만 높은 자본집약도 역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함이 밝혀짐

○ 또한 산업내의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 발전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진입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결국 진입규제에 의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우 산업의 성장이 더뎌진다는 것을 보임

-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 전체의 성장률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진입률에 의해 양(+)의 영향을 받음

- 결국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는 신규 사업체의 해당 산업 진입을 억제하고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

□ **같은 기간(1999~2002) 동안 IMD의 자료를 활용, 42개국의 법규제 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밝혀짐**

○ 분석기간 중 우리 나라의 평균 법규제지수는 평균 규제지수 6.1에 미치지 못하는 4.7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우리 나라가 동 기간 중 IMD의 42개국 평균 규제지수인 6.1 정도로 법규제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연평균 약 0.5%p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사업체들이 법규제 등이 존재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법규제가 없는 경제의 성장률보다는 어느 정도의 체감규제가 존재하는 경제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 규제가 전혀 없는 경우보다 양질의 규제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경제성장을 위해 더 효과적임을 시사

제12장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 : 부패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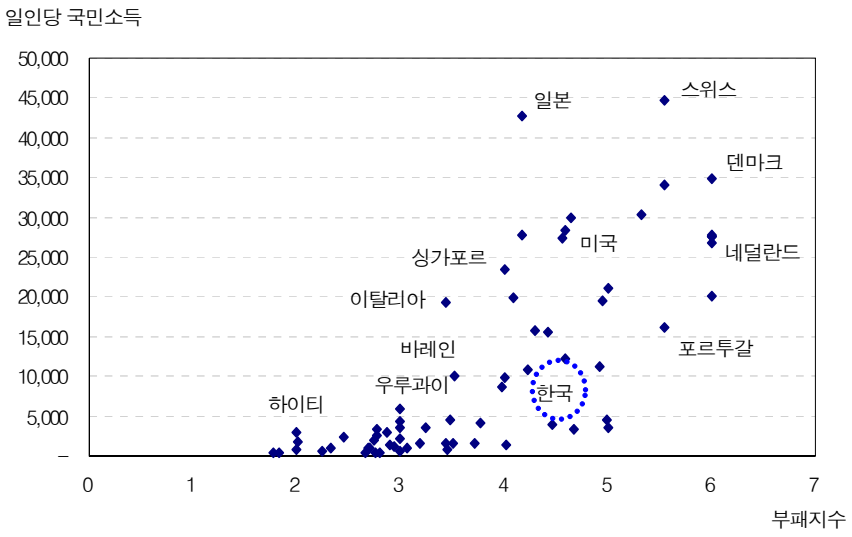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1990년대 우리 경제는 OECD국가의 평균보다 부패 수준이 높아, 우리가 OECD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부패를 지녔을 가상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연평균 약 0.72~0.83%p 내외의 성장 손실을 경험

□ **본 연구는 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암묵적으로 규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의 주요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론적·실증적 분석에서는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된 부패법과 질서의 준수 등을 대표적 변수로 선택, 활용함**

○ 제도적인 변수나 사회적 관습은 경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진입이나 조업에 있어 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부패 등 사회 관습과 제도는 국민소득수준 또는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자료: Political Risk Service Group (2004), World Bank (2004).

□ **이론적으로 부패의 존재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왜곡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 소비경로도 왜곡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됨**

○ 제도적 변수,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사용한 부패의 존재로 인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경제 전체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에서는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조업 동기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부패 등에 의한 암묵적 진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과 이로부터 기업이 얻는 대가는 경제의 소비 패턴까지 변화시키며, 특히 생산에 있어서는 자본의 점유율이 노동의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에 따른 성장손실이 개도국보다 큼

- 즉 우리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패의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약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왜곡과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

□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활용, 1991~2000년간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67개국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패수준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부패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도 비율에 맞춰 일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님

- 부패수준이 높지 않은 경제의 경우 부패가 척결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증가하지만,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 그룹에서는 부패가 감소하며 평균 경제성장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따라서는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패가 척결되면서(부패지수가 변화하면서) 경제 성장이 오히려 한동안 둔화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낮은 부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

-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가 어느 정도 척결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패의 추가적인 척결에 따라 경제 성장이 제고될 것으로 추정

□ **부패와 더불어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도 경제성장에 관계를 미침**

○ 관료제 질의 개선, 법과 질서의 준수 등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 경우 그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음

- 민주주의가 미숙한 국가 그룹에서는 민주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성장이 지체되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룹은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며 성장율이 증가하는 모습 발견

□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경제가 사회·제도적 변수(특히 부패)의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1990년대의 10년간 약 0.72~0.83%p 정도의 추가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이 결과는 국내투자, 해외투자, 개방의 정도, 교육수준, 초기 국민소득 등의 주요 변수를 제어한 상태에서 얻어진 수치임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제3부 거래 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부분은 3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 **제Ⅱ부는 우리나라에서 조업하는 기업이 창업과 생산 활동을 통해 느끼는 규제를 주제별로 조감**

○ 기업은 입지를 정하고 창업 후,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 생산 활동을 영위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와도 맞부딪치는 바, 제II부는 이러한 제반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명시적·암묵적 규제를 논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제4장은 창업에 관해, 제5장은 입지 중 가장 현안문제인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제6장은 노사관계의 초미의 관심사들에 대해, 제7장은 투자에 대해, 그리고 제8장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함

제4장 창업규제 현황 및 규제개혁방향

김 광 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온라인으로 설립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감소시키는 지속적 노력 필요

□ **창업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행위이므로, 창업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의 개선이 중요한지를 진단하여, 이의 해소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

○ 창업 부진은 일정 부분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정책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창업 및 산업경제활동을 성가시게 하는 규제로 인하여 창업의지가 저해 받아 창업이 둔화되는 문제는 규제개혁 등 정책적 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임

□ **법인 설립과 관련된 규제개선에 있어서는 창업자가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서류를 표준화하고, 창립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을 면제하는 등 공증서류를 간소화하며, 법인설립 등기신청에 따른 채권 구입을 면제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필요**

□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설립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모범사례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는 1단계로 온라인상에서 기업의 설립양식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2단계로 조세당국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음으로써 설립이 완료됨

□ **주금의 위장납입 문제는 법인설립등기 시 세부 주소지의 등재를 설립 후 일정기간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시에 하도록 개선해야 함**

○ 그러면 초기 자본금을 예치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지를 광역으로 표시하여(예를 들어 주소기입란에 '서울'로 기입) 설립등기를 하고 예치금을 찾아 정상적으로 사무실임차 등 비용지출을 할 수 있음

□ **입지규제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발 논리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개발제한 논리 간의 상충문제이고,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임. 따라서 양 논리의 절충으로 '적정 수준'의 규제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꼭 필요한 필수규제만을 한정하여 개별규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

○ 각종 인·허가절차의 단순화, 구비서류의 간소화 및 중복서류 배제를 통해 구비서류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일괄의제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함

○ 입지에 있어 규제, 민원은 대부분 개별입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계획입지의 활성화로 근원적으로 공장난립, 환경훼손 방지 및 창업관련 규제의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민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민간산업단지 건설 시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부지조성원가를 낮추어 주는 것과 같은 유인책이 그 일종임

○ 도시 내외에 적정규모의 계획입지를 활성화하면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집적효과와 함께 주부노동력 이용 등 탄력적인 노동력 투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산업입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개별입지에의 공장설립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감수하고 향후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개별입지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기대심리 및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음

- 높은 공장부지가격으로 인한 제조업 기피 및 외국자본유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거시경제차원의 산업입지의 질(Quality of Location)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창업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창업절차, 소요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창업가이드북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공하여 창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창업절차 수행의 On-lin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제5장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 상 철 성공회대학교 교수

수도권 입지규제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갖는 경제적 특징과 향후 산업구조 변화 등을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져야

□ **본 장에서는 그 동안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수도권 입지규제 방안을 모색**

□ **또한 수도권 입지규제가 수도권 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향후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 위에서 구상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갖는 경제적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

□ **향후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정책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함**

○ 수도권 소재 산업 실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함

○ 또한 수도권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갖는 경제적 특징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어야 함

□ **제조업 입지와 관련된 수도권정책은 글로벌한 측면에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함**

○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한편에서는 과밀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로의 집적을 통한 생산측면에서의 외부경제가 주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냄

○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또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 문제가 될수록, 혁신을 유발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그렇지만 현재의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혁신 성과의 확산과 관련하여, 입지측면에서 실질적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입지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일정하게 성장한 기업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이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생산 측면뿐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 (수도권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갖는 경제적 특성이 수도권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소비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도시 내에서의 집적은 다양한 지역재의 공급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시 내부의 어메니티(amenity)를 제고할 수 있음.

- 이는 집적에 따른 또 다른 차원의 편익이 됨.

- 또한 이러한 소비측면에서의 집적효과는 생산에서의 집적효과와 결합하여, 보다 고학력·고숙련 커플을 대도시로 유인하는 효과를 나타냄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반세기에 걸친 공업화, 급속한 사회변동, 그리고 일인당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소비에 대한 계층간·세대간 태도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결국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측면에서의 집적효과는 수도권지역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상대적 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

○ 향후의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은 이러한 소비측면에서 집적효과를 고려하면서 기획될 필요가 있음

제6장 고용 해고 및 노사관계에서의 규제와 대안

김 용 성 KDI 연구위원

선진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노사자율의 원칙하에 노동시장 로드맵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착실히 진행할 필요

□ **본 장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규제와 대안을 모색**

○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국내외 기관의 부정적인 평가가 최근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고용과 해고제도의 개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음

□ **해고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고와 관련된 분쟁가능성의 사전 축소 및 효율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제도와 다양한 구제수단의 도입을 고려**

○ 해고와 관련된 분쟁가능성을 축소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개진 및 소명자료제출의 의무화 및 화해제도의 강화

○ 부당해고의 경우 그 구제방안으로서 원직복귀에서 금전적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 한편 경영상 집단해고의 경우 해고의 규모와 정도에 따라 사전통지기간의 탄력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과 남용을 억제**

○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단축에 따른 지나친 고용계약의 반복갱신은 추가적인 노동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3년 미만임을 참조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견의 폭을 좁혀나갈 필요

○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시정되어야 하나 현실성을 감안하여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비임금부문의 차별을 시정하고 점진적으로 임금부분의 격차해소를 도모

□ **선진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노사자율의 원칙하에 노동시장 로드맵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착실히 진행할 필요**

○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노사관계 로드맵이 제시한 과반수 또는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창구단일화를 실현

○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규모와 재정상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

제7장 투자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정 인 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투자경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규제는 기업의 행위가 후생을 저해할 경우에만 사후규제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본 장에서는 경쟁정책 차원의 규제제도와 그 실행방식을 투자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함**

□ **시장 경쟁에서 기업의 투자인센티브**

○ 기업의 투자인센티브는 여러 요인과 효과에 의하여 결정되며, 경쟁적 시장에서 결과 되는 투자는 제반 효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과다할 수도 과소할 수도 있음

○ 투자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구도를 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전유성(專有性: appropriability) 효과와 투자경쟁효과를 극대화하여 과소투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임

□ **경쟁정책 차원의 규제 접근법: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특정 행위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 사전규제의 정교화는 바람직한 행위를 제약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허용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가능한 한 사전규제는 사후규제의 근거와 규제의 원칙을 제시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정책의 개선방향**

○ 규제의 합리화 및 투자 효율성의 차원에서 대기업정책,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통신시장에 대한 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재벌정책에 있어서는 현재의 강력한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반사회적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지배력 남용금지에서는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으로 국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서는 부당성을 사회규범에 대한 위배라는 의미에서의 불공정성으로 한정하여야 함

○ 통신시장의 사례에서 경직적이고 정치적인 요금규제가 투자인센티브를 저해함을 지적하였고 잘못된 논리가 오히려 기업의 투자인센티브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현재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제도와 그 운영은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하며 과도하게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기업의 행위에 대한 금지는 그 행위가 후생을 저해할 경우에 국한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더욱 선진화,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

제8장 환경규제와 기업활동: 현황과 대안

홍 종 호 한양대학교 교수

직접적인 환경 규제보다는 환경경제통합 경제성평가의 정착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합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 **본 장에서는 환경보전과 기업활동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대전제로 우리나라에 있어 바람직한 환경규제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모색**

○ 특히 기업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스스로 높은 환경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환경규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임

□ **환경규제는 총 41개에 달하는 정부의 행정부문 중 금융 및 통화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제 건수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규제들의 다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전적, 사후적 직접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제조업체의 창업과 관련해서는 총 19개의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 받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입지규제,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 절차이행에 대한 규제 등 사전규제에 해당함

○ 기업활동과 관련한 환경규제 현황을 건설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신청, 서류작성, 보고, 신고, 개선명령 이행, 통보 등 각종 형태의 직접규제 조항이 8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에 대한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규제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수단 혹은 정보유인 수단 등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규제는 감시 및 감독을 위한 각종 행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위한 정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유인이 생기게 되며, 이는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 **환경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 경제정책 및 개발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환경경제통합경제성평가가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

○ 환경규제의 도입 과정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합리적 접근이 요구되고,

○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저감기술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조직 및 경영상의 관리방안을 끊임없이 시도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환경규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 현재까지 간과되어 왔던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환경약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환경정책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임

□ 바람직한 환경규제 수단의 구체적 예로서 의무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들 수 있음

○ 이는 최근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 적용되고 있는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환경규제의 주체는 정부라고 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시장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 제도는 오염배출량을 포함한 기업의 각종 환경관리 실적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 공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경제적 유인수단 혹은 정보유인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증분석으로서 환경부가 90년대 이후 월별 보도자료의 형태로 공개한 배출위반업체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정보가 해당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배출위반업체로서 언론에 보도된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장가치 하락률은 9.7%로 나타남.

□ OECD를 중심으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환경규제 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 왔음

○ 과거의 직접규제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적극 도입하며 나아가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방향에서 미래의 환경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향후 환경규제의 기본방향은 기업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스스로 높은 환경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유인체계를 지속적으로 제공,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제3부 거래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 **제Ⅲ부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 이후 발생하는 생산물의 거래행위와, 수익에 따른 조세부담에 대해 연구**

○ 거래행위가 생산물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와 연결될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해질 우려가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거래에 대한 규제(제9장)로 그 범위를 한정짓고, 제10장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한 국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

제9장 거래규제: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이 재 형 KDI 전문연구원

거래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 룰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정책의 발전을 도모해야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정도와 속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은 지난 20여년간 눈부신 성과를 보여 왔음**

○ 그 가장 큰 이유는 여타 분야의 규제는 제도의존성이 큰 반면, 거래활동은 가장 시장적인 요소가 많은 기업활동 분야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경제 환경 및 조건의 변화나 시장의 역동성, 시장참가자의 의식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쉽게 극복될 수 있었기 때문임

□ **본 장에서는 지난 20여년간에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어온 거래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가능케 하였던 동인에 대해 분석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함**

□ **거래분야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창업이나 퇴출, 기타 여러 형태의 규제와 비교할 때 그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규제의 형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이 있음**

○ 또, 여기에는 정부규제와 함께 사적규제도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과 경제적 효율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개혁과 아울러 사적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임

□ **규제개혁의 목표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동태적 역동성을 높이는데 있음**

○ 이러한 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규제개혁정책과 경쟁정책은 수레의 양 바퀴를 이루고 있음

○ 즉, 규제개혁정책이 공적규제를 정비해나가는 것이라면, 경쟁정책은 사적규제를 혁파하는 기능일 것이며, 이러한 두 정책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또 상호 공백부분을 보완하면서 시장경제를 진화시켜 나가는 것임

□ **거래규제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개별 특별법에 의한 규제에 대하여 그 존속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것임**

□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산업연구 및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부서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규제개혁을 진전시켜야 할 것임**

제10장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 성태윤 KAIST대학원 교수

조세를 이용한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해

□ **본 장은 세계 120여개국의 3만여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패널원자료인 Osiris를 이용하여 산업별 조세부담의 차이를 측정하고, 이러한 조세부담차이가 산업부문별 성장, 그리고 경제 전체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세, 규제, 산업 성장,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산업별 조세 규제의 차이는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측정하고 이러한 정책이 산업별 성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로, 우리나라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1990년대 초반 33%에서 2000년대는 29%로 하락하여 비교대상 52개국중 26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1990년대 이후 법정세율의 인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법인의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대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관찰되며, 헝가리(11%), 대만(14%), 홍콩(14%), 싱가포르(22%) 등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폭 낮고, 브라질(28%), 스웨덴(29%), 영국(30%), 중국(30%) 등의 유효한계세율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금융부문의 유효한계세율이 낮고 통신부문이 가장 높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의 정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차별적 적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셋째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다소 상승하여 자산대비 3.7%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감가상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넷째로,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양(+)이 아님을 의미

□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산업들중 금융산업, 기술산업, 에너지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낮고, 통신산업, 의료산업, 유틸리티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통신산업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감가상각 활용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아주 크지 않았을 수 있음

※ 문의 : 차문중 (☎0 2-958-4204)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